

미국 정권교체와 전세계 기후위기 의식 확산으로 기후행동에 관한 정치적·대중적 모멘텀 상승

2021.01.28.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기후변화를 알리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하자는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1월 25일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과학적 증거가 지금

보다 더 명확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후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기후 극한현상과 기후 변덕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영향은 모든 대륙의 모두의 삶과 생계에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날씨, 기후, 물 관련 위험으로 인해 11,000건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약 3조 6천억 달러(한화로 약 3,900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극한 기상과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41만 명 이상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빈곤 국가 국민들이었습니다.” 라고 유엔사무총장은 말했다.

미국의 기후에 관한 행정명령

많은 국가들이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G20 회원국인 한국, 영국, 일본, 유럽 연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순 배출제로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했다. 이 세계 최대 배출국의 목표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월 28일 전지구적 차원의 캠페인 “Race-to-Zero

(제로를 향한 경주)“ 돌파를 공표하고 이를 통해 금세기 중반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공약을 중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기후 행동에 관한 파리 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모멘텀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커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 “기후위기를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고려사항의 중심”에 놓겠다는 행정 행동 명령을 내놓았다.

이 명령은 기후를 미국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기후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여기에 21개 연방 기관장들과 부처의 리더들을 참여시켜서 정부 내 전 기관이 기후위기에 대한 통일된 대처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행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지구적 기후 야망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을 확인한다. 위험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기후변화 궤적에서 세계를 벗어나게 하려면, 세기 중반 또는 그 이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단기적 전지구 배출 감축과 전지구 배출 순 제로가 모두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 이 명령이 재확인해 주는 사항으로,

-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미국 대통령이 기후 정상 회의 주최
- 미국 주도로 주요국 경제포럼을 다시 소집할 예정
- 미국 외교 정책에서 기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행정부의 공약을 뒤받침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직책인 대통령 기후특사를 신설하고 국가안보 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토록 했으며,
- 기후야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는 포럼에서 기후 이슈가 반드시 고려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용하는 조치를 미국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임.

▷ 기후재정계획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에 의거 미국의 “국가결정기여(NDC)(미국의 배출감축목표)를 개발하는 과정도 시작한다.

▷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서 기후를 우선순위로 두기 위한 여러 다른 조치들 가운데, 이 명령은 미 국가정보국장에게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정보추정(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지구촌 기후 투표 (기후 설문 조사)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64%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글로벌 비상사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기후 투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개국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는데, 여기에 아직 정식 투표 연령이 아닌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핵심 당사자인 18세 미만 연령층 5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투표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과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주관하였다.

설문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기후변화가 글로벌 비상사태인지, 경제, 에너지, 운송, 식량 및 농장, 자연, 사람 보호 등 6개 행동 영역에서 18개의 주요 기후 정책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결과는 사람들이 대체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기후 정책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10개 조사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대다수가 재생 에너지 생산이 더욱 확대되어 한다고 대답했다.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정책 선호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진 5개 국가 중 4개 국가에서 산림과 토지 보존에 대한 지지가 대부분이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장 큰 10개국 중 9개국은 깨끗한 전기차와 버스 또는 자전거 사용을 더 많이 지지했다.

재난 대비

영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며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협상의 장이 될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주최한다.

WMO 사무총장 Petteri Taalas 교수는 UN 및 인도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G-7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글로벌 합의를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했는데, 합의의 주제는 “우리가 직면한 큰 위협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예측하고, 준비케 하고, 보호한다”이다.

“우리는 전염병, 식량 충격, 극한 기후 사건과 같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위협을 예방하고 줄이고, 사람들 특히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위협들이 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훨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과학과 전문지식이 있지만, 중요한 데이터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아직도 재난을 놀라운 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재난이 닥쳤을 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적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원조 그릇을 돌리게 되는 현실은 여전히 여전합니다.” 라고 말했다.

WMO 재해위험경감(DRR)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생계, 재산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2019년 열린 세계기상총회에서는 몇 가지 정책 승인이 있었는데, 목적은 인도주의적 활동에 기상지원을 강화해서 재해에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WMO 조정 메커니즘 및 전지구 다중 위험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데이터를 책임지는 GBON(Global Basic Observing Network 전지구 기본관측망)같은 장치가 기본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 심각한 데이터 격차 해소의 중요성은 G-7 리더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강조되었다. WMO는 이와 관련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 관측 재정지원 체제(Systematic Observations Financing Facility: SOFF)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데이터 격차“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